

# “평화통일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 통일준비위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형성 보고서’

## 정권교체에도 일관적 정책 필요...소선거구제도 재검토 필요

‘남남(南南)갈등’을 넘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 보고서는 3일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통일 정책과, 이를 위한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는 갈등의 완화에 기여하기보다 이를 야기·증폭하는데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방안 중 하나는 “승자독식제도에 의한 의견의 극단

화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제도”이며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의해 통일정책 변화시기가 너무 빠른 주기를 갖는 것도 재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단 한 표라도 적게 받은 후보는 정치에 대해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전 국민의 전체 의견이 선거결과로 정확히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격주의’를 지양하는 태도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단기적 성과를 조급하게 추진하고 이를 정부·여당 스스로의 정책 성과물로 홍보하면, 야당은 정치적 생존을 걸고 그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생겨 남남갈등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야당과 사전 협의의 거치고 정치적 성격의 홍보를 지양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성과가 특정 정파가 아닌 여야와 국민 모두의 몫이 되도록 하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의 기본 규범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4개 진보 세력 통합

### 정의당 간판 22일 전대 개최

### 내년 총선 본격 준비 돌입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3일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세력은 일단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의 간판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 나경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정당·단체가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양당 독점의 한국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오늘의 통합 선언을 통해 진보정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진보정당은 앞으로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오는 22일 통합전당대회를 하고 총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총선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두자릿수 정당 지지를 확보를 목표로 지역구 절반 이상에 후보를 낼 방침이다.

당명은 “정의당”을 사용하되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원 투표를 통해 새 당명을 정하고 심상정 대표를 상임대표로 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배가 더 고프다. 모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더 혁신해서 성장하겠다. 유능하고 참신한 각계각층의 인재를 영입하고 광범위한 민주시민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대 모인 與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원우철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여, 민생 외치며 대야 압박

### 국정화 국면 마무리...국회 울스톱 야당에 책임 공세

새누리당은 3일 당초 예정보다 이를 앞당겨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뤄진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세게 반발하자 민생에 울안하는 기조로 차별화하며 전방위 대야압박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야당의 극심한 반발은 이미 예상했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현 국면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을 처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거부가 길어질 경우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체될 것을 우려하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야당을 협조를 압박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

서 ‘야당 심판론’을 적극 제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상임위 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여야 대화도 중단되면서 국회 활동이 울스톱될 조짐을 보이자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우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경제특위’ 등도 잇따라 열어 농성에 돌입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이 안되면 산업계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기가 막힌 심정”이라면서 “노동개혁을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야당에도 여론으로 압력을 넣어달라”고 말했다.

원우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오늘 합의한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시급한 국정 현안을 미루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孫, 현안은 ‘관심’...복귀는 ‘여운’

### 중앙아시아 방문중...복귀 질문엔 미소만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복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 전 고문이 국내 현안에 관심을 보였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인 손 전 고문은 2일(현지시간) 저녁 현지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잘됐나?”라며 국내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참석자 지인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최근 화제라 그 현장을 보고 싶었다”며 이번 중앙아시아 방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하고 아베 일본 총리도 최근 이곳에 왔다는 걸 들었다. 요즘 여기가 중요한 곳이긴 한가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정계 복귀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하고 웃음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손 전 고문계 인사들이 대규모 만찬 회동을 했다. 손 전 고문이 작년 7월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 ‘손학규계’ 인사들이 대규모 회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낙연 전남지사 주재로 마련된 이 회동에는 김동철·신학용·양승조·오제세·조정식·우원식·이찬열·이개호·임내현·최원식 의원과 송태호 동아시미래재단 이사장, 김우정·서종표·전혜숙·최영희 전 의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손 전 고문 측은 이 모임이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와 관련한 정치적 의미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지만 참석자들은 손 전 고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손 전 고문이 정계 은퇴를 접고 역할을 해야 한다”, “나라 국민 앞에 손 전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직설적으로 정치활동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운명에 맡길 부분”이라며 주변에서 재촉할 성질이 아니라고 했고, 최원식 의원은 “당 선배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분”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野 비주류, 文 면전서 “물러나라”

### 다음주 성명서 발표·서명 추진 결의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진영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와 회동,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다음 주 내에 문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당내 비주류 의원들과 문재인 대표를 만났으나 서로의 벽을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비주류 성향 의원들은 문 대표에 사퇴 의사를 물었고, 문 대표는 이에 불쾌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표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론에 대해 “다수가 사퇴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나도 모르겠

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통합 전당대회 개최, 비상대책위 및 조기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며 현재의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총선을 치러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모 의원은 “문 대표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날 회동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제 문 대표의 퇴진은 실책이 아닌 의원들의 실력 행사 등 적극적 압박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주류 진영 의원들은 다음 주 내에 10·28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문제인 대표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 전당대회 개최 등을 위한 당내 의원들의 서명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